

Governance Opinion

< 공시규정 개정을 통한 규제사각 해소 필요 >

한 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영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투자자가 인지토록 하고,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정보가 모두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공시규정을 통해서 상장회사에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상장회사는 공시규정에 근거해 기업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특히, 양적측면에서 정보의 중요성 기준은 재무제표(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토대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사실 또는 변동일 것을 요구한다. 예를들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의 공시여부는 개별 사안에 마다 양적요건을 적용해 판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상장회사가 대여금을 자기자본 10% 미만의 금액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대여하는 경우 공시규정 상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설령 대여금이 누적으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더라도 대여금 집행 시 마다 개별적으로 자기자본 1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누적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 : 대여금 증가 사례 - 피앤티>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1분기	2012년
자산총액	213,076,035	163,158,662
대여금	33,327,289	6,946,700

* 상기 재무자료는 연결기준임.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앤티(054340)은 2012년 말 69.46억원이던 대여금이 2013년 1분기말 333.27억원으로 약 263.81억원 증가했다. 2013년 1분기 중 증가한 대여금 263.81억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2년) 자산총액 1,631.58억원의 약 16%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피앤티는 2013년 1분기 중 대여금 집행에 관한 결정이 있었음을 공시하지 않았다.

<참고 : 피애텔의 2013년 1분기 공시 내역>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1	 피애텔	정기주주총회결과	피애텔	2013.03.29	
2	 피애텔	[첨부정정] 감사보고서제출	피애텔	2013.03.25	
3	 피애텔	감사보고서제출	피애텔	2013.03.21	 
4	 피애텔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부인)	피애텔	2013.03.15	
5	 피애텔	주주총회소집공고	피애텔	2013.03.14	
6	 피애텔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중국 현지 계열사 천진피애텔통신유한공사 매각설)	코스닥시장본부	2013.03.14	
7	 피애텔	주주총회소집결의	피애텔	2013.02.28	
8	 피애텔	매출액또는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변동	피애텔	2013.02.15	
9	 피애텔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김종대	2013.02.06	

* 위 표는 2013.01.01~2013.03.31 피애텔의 공시서류 검색 결과임.

아마도, 몇 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집행되었음에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주와 투자자들은 대여금 집행에 대한 공시가 없었기 때문에 2013년 1분기 중 자산총액의 16%에 이르는 대여금의 증가로 자산구성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즉시에 인지할 수 없었다. 피애텔의 대여금 증가 사실은 1분기 종료일(2013.03. 31)을 2개월이나 지나 2013.05.30 공시된 분기보고서 상 재무상태표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 이라는 기업공시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여금 뿐만이 아니다.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영활동들 중 단기차입금의 증가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결정,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도 마찬가지로 누적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참고 : 채권, 채무관련 공시의무 사항 중 공시의무 강화(누적기준 적용)가 필요한 항목>

KOSPI 시장	KOSDAQ 시장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채무 인수 및 면제 결정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채무 인수 및 면제 결정
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타인 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타인 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 대여금 집행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선급 금, 금전 가지급, 금전 또는 증권대여 결정

* 대규모 법인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임.

이들은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상장회사의 자산 건전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항목들인 동시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항목들이다. 회사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상장회사들의 사고 유형을 보면, 대여금이나 선급금, 담보제공 등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채권·채무 관련 경영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의무를 누적기준으로도 적용해 공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 다목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다목은 상장회사의 경영활동 중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채권·채무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통으로 상장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단기차입 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 결정,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피앤티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변동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상장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사채나 대출금의 원리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시 규제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상장회사의 재산상태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차입 결정, 채무인수 및 면제 결정,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대여금·선급금·금전가지급 결정 같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누계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도록 공시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